







#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국책사업 공모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연구진

홍근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서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Contents

<b>I</b>	<b>서론</b>	
	1. 연구배경 .....	04
	2. 연구내용 .....	05
<b>II</b>	<b>우리나라 국책 공모사업 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b>	
	1. 국책 공모사업 개관 .....	06
	2. 해외사례 검토 .....	13
<b>III</b>	<b>대전광역시 국책 공모사업 실태분석</b>	
	1. 현황 분석 .....	19
	2. 핵심 이슈 분석 .....	26
	3. 선정기준 분석 .....	29
<b>IV</b>	<b>국책 공모사업 합리적 개선방안</b>	
	1. 지방비 부담 완화 .....	59
	2. 지역 균형발전 측면 선정기준 적용 .....	60
	3. 선정기준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	60
	4. 지방자치단체 사전 준비기간 제공 .....	61
	<b>참고문헌</b> .....	62



## 서론

### 1. 연구배경

- 국책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의존을 억제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색과 필요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국고보조사업 제도의 한 형태임
- 그러나 국책 공모사업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 규모 및 비율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둘째, 지역 인프라와 재정력 차이로 인해 공모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셋째, 불규칙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공모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이 요구됨
  - 실제 국책 공모사업이 기존 인프라와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이로 인해 공모사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국책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 사업 규모 및 수, 선정 기관의 특성 등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이 요구됨

## 2. 연구내용

- 국책 공모사업의 정의 및 목적 등을 살펴보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최근 5년 동안의 분야별·회계별 공모사업의 실태 및 관리·운영체계의 전반적 내용을 기술함
- 국책사업을 공모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미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국책 공모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3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함
  - 첫째, 2018~19년도를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정도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의 위치 및 부담정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음
  - 둘째,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언론 기사를 통한 공모사업 핵심 이슈를 분석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시 기사화를 통한 홍보 및 지역적 핵심 현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마지막으로 기존 공모사업 선정기준이 수도권에 유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공모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를 통해 현행 국책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함

## II

# 우리나라 국책 공모사업 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

## 1. 국책 공모사업 개관

### 1) 국책 공모사업의 개요

#### 국책 공모사업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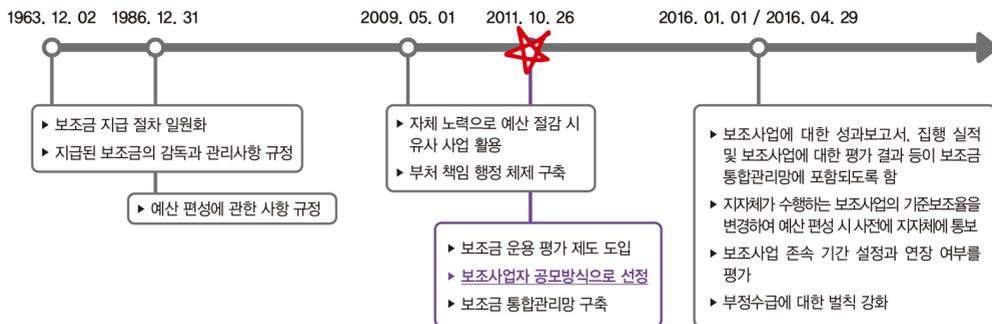
- 공모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운영 형태 중 하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대가 없이 재원을 급부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함(한국재정정보원, 2018)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함
  - 또한 모집대상과 지원영역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

#### 국책 공모사업 목적 및 연혁

-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의 목적은 중앙정부에 치우친 재정의존도를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특히 공모사업은 각 지방정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규모를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지방정부 의지와 책임성 확보,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공모사업 추진 근거 규정은 있으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개념이나 공모사업 추진 세부기준 등(예: 100억 이상의 국고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중앙부처가 임의적 혹은 내부기준에 의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공모사업은 2011년 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주요 내용 변화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그림 2-1 | 국고보조금 시행 연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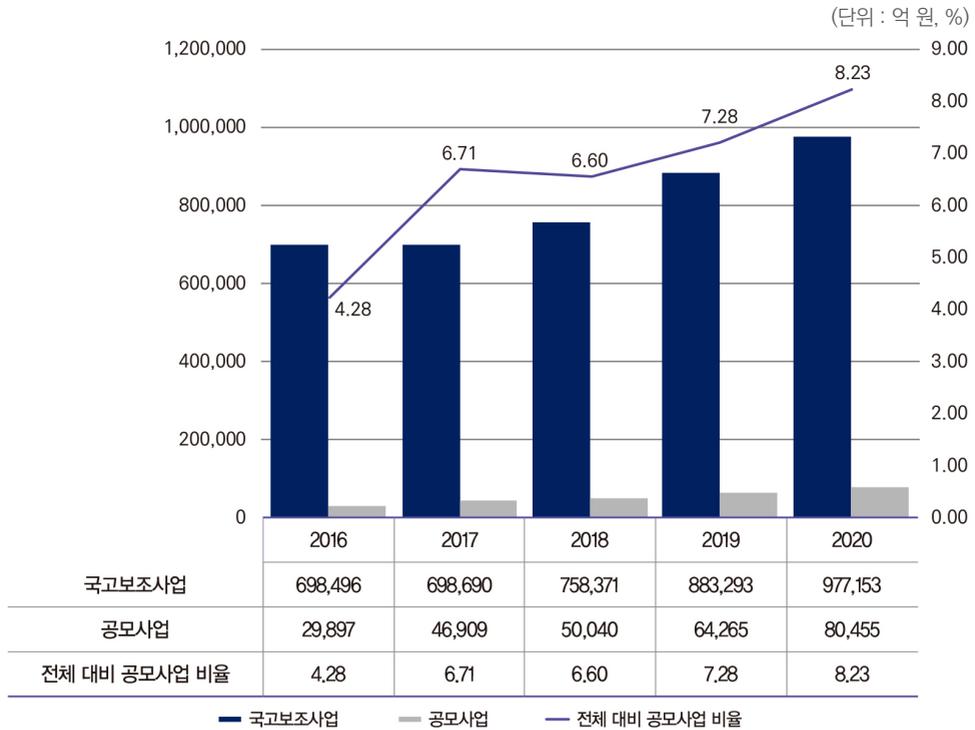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2018: 41) 재구성

## 2) 국책 공모사업 일반 현황

### 국책 공모사업 규모

-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공모 사업의 경우 반드시 지방비를 부담 하도록 하고 있음
- 2020년도 기준 국고보조사업은 97조 7,153억 원이며 이 중 8조 455억 원, 8.23%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되고 있으며, 매 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2-2 |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 •



출처 : 행정안전부. 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공모사업은 회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기금사업이 64개, 일반회계 58개 순으로 나타남

• 표 2-1 | 회계별 공모사업 수와 규모 •

(단위 : 개, 억 원, %)

	사업수					비중(2020)		국고 보조율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사업비	국비		
전체	일반회계	35	44	46	60	58	4.4	4.4	53.2
	특별회계	35	50	57	53	49	55.7	56.6	53.9
	균특회계	8	14	16	22	14	26.9	28.9	56.9
	기금	34	54	57	67	64	13.0	10.2	41.6
전체	112	162	176	202	185	100.0	100.0	53.1	

출처 : 박병희 외(2020). 부분 인용

- 2016~2020년 사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의 비율은 4.28%에서 2020년도 8.23% 까지 두 배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국책 공모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전체 국고보조사업 보조율보다 낮은 편임
  - 2020년 기준으로 사업당 평균 총사업비는 434.9억 원이며 국고보조율은 대체로 낮은 수준임
  - 표 2-3을 살펴보면, 공모형 국고보조율은 53.1%인 반면에(2020년 기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이 67.1%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재정기능별로 공모사업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업수에서는 농림수산부문이고, 총사업비는 3.0조 원임
  - 농림수산부문의 공모사업이 매해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음
  - 문화관광부문에서도 공모사업이 많은데, 2020년 기준으로 총사업비 98억 원, 46개 사업을 분포됨. 사업 당 배분 금액이 약 2.1억 원으로 소규모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건수는 많지 않지만(총 11건) 총사업비는 2.2조 원으로, 한 사업당 예산 규모가 큼

• 표 2-2 | 최근 5년간 공모사업의 규모와 기능별 분포 •

(단위 : 개, 억 원, %)

(억 원, %)	공모사업											전체 국고 보조 사업 (B)	사업당 평균 사업비 (억 원)			
	일반 지방 행정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수산	산업 중소 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 기술			합계 (A)		
	2016	4		31	6	6	10	46	2	4	2	1	112	839	13.3	266.9
	2017	4	1	41	11	9	10	68	5	6	6	1	162	960	16.9	184.6
사업수	2018	7	1	45	10	11	10	75	5	4	7	1	176	990	17.8	284.3
	2019	7	1	48	11	19	12	77	8	7	11	1	202	1,062	19.0	318.1
	2020	5	1	<b>46</b>	11	17	11	<b>69</b>	6	7	11	1	185	1,033	17.9	4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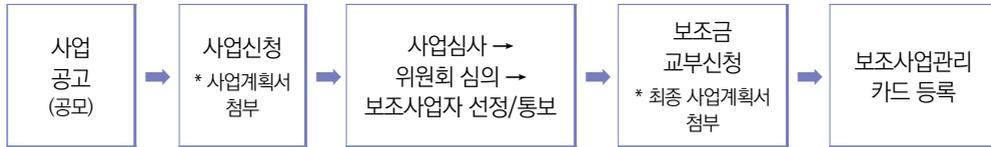
(억 원, %)	공모사업											전체 국고 보조 사업 (B)	사업당 평균 사업비 (억 원)	
	일반 지방 행정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 기술			합계 (A)
총 사업비	1,043		541	4,788	44	1,534	19,302	802	1,254	477	113	29,897	698,496	4.3
2016 국비	561		296	2,148	33	883	8,657	337	574	191	56	13,736	460,700	3.0
국고 보조율	53.8		54.7	44.9	74.2	57.6	44.9	42.0	45.7	40.1	50.0	45.9	66.0	
총 사업비	1,367	72	79	7,851	21	1,554	26,851	2,540	1,728	4,738	108	46,909	698,690	6.7
2017 국비	1,156	42	32	3,498	15	891	12,110	1,232	819	2,658	54	22,509	464,318	4.8
국고 보조율	84.6	58.7	41.0	44.6	74.2	57.4	45.1	48.5	47.4	56.1	50.0	48.0	66.5	
총 사업비	573	23	62	7,677	17	1,660	24,966	2,214	1,679	11,063	107	50,040	758,371	6.6
2018 국비	305	11	32	3,657	14	918	11,004	1,311	793	5,834	54	23,932	501,728	4.8
국고 보조율	53.2	50.0	51.2	47.6	83.6	55.3	44.1	59.2	47.2	52.7	50.0	47.8	66.2	
총 사업비	370	23	90	9,199	66	2,130	31,473	2,946	2,875	14,986	106	64,265	883,293	7.3
2019 국비	211	11	46	4,464	36	1,228	15,180	1,688	1,387	8,299	53	32,604	588,397	5.5
국고 보조율	56.9	50.0	51.5	48.5	55.3	57.7	48.2	57.3	48.2	55.4	50.0	50.7	66.6	
총 사업비	137	22	98	22,322	87	2,708	29,919	710	6,832	17,518	102	80,455	977,153	8.2
2020 국비	88	11	53	11,963	48	1,521	15,110	355	3,524	9,973	51	42,696	655,956	6.5
국고 보조율	64.5	50.0	53.9	53.6	54.6	56.2	50.5	49.9	51.6	56.9	50.0	53.1	67.1	

출처 : 박병희 외(2020)

### 국책 공모사업의 관리체계

- 국책 공모사업의 관리체계는 한국재정정보원(2018)의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자료를 발췌·요약하였음
- 공모사업은 ‘공모와 선정’, ‘집행’, ‘정산평가’로 구분하여 관리체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공모와 선정 단계를 제외한 집행 및 정산평가는 기존 국고보조금과 관리체계가 동일함

-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받고, 평가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침



- 공모사업 관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선정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논의임
- 공모사업 선정기준은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한 기준을 통해 제시하고 있음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를 평가 기준으로 규정”하였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 능력,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함(국고보조금 통합지침 제1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가능성,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 확보 여부”를 고려함
- 실제 대표적인 공모사업 선정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아래 표는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형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요소를 구분한 것임
  - 대표적 공모사업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사업의 목적과 계획성, 전문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추진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3 | 대형 공모사업 평가기준(예시) •

평가기준	대형 공모사업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시범도시 (2007년)	첨단의료 복합단지 (2009년)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 (2015년)	소방복합 치유센터 (2018년)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 (2019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018년)	스타트업 파크조성 (2019, 2020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2020년)	K-바이오 랩허브 (2021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2021년)
사업목적 달성(적정성) 및 계획성		✓			✓		✓	✓	✓	✓	
입지여건 적합성			✓	✓		✓		✓	✓	✓	✓
과제 수행 역량 (사업계획서 내용 충실도 평가)					✓						
재원조달의 용이성	✓								✓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발전)	✓	✓	✓			✓	✓			✓	
개발 용이성, 부지 확장성	✓									✓	✓
접근성		✓	✓				✓	✓		✓	
정주여건				✓		✓				✓	
수행 인력의 전문성, 협업 역량			✓	✓	✓	✓	✓				
신청기관 추진의지, 지자체 지원	✓	✓	✓	✓	✓	✓	✓			✓	✓
환경영향	✓									✓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	✓		✓
주민 수용성				✓						✓	
신청 지역	인천	대구·경북, 충북	대전	충북	경북	대전	인천, 대전	경남	인천	충북	

출처 : 각 공모사업 신청 공고안 참조

- 사업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마지막으로 운용평가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검증 기관)으로부터 정산 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 2. 해외사례 검토

### 1)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 제도

- 미국 연방정부의 보조금 제도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s)과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포괄보조금은 그 사용에 있어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하위정부(주정부/지방정부)에 많은 자유재량을 인정하는 보조금으로 하위정부의 일반재원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특정보조금은 인구, 면적, 1인당 소득 등을 기준으로 특정 공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특정 공식 보조금(formular categorical grants)과 연방정부가 지정한 사업에 대해 하위정부의 신청에 의해 배분되는 특정사업 보조금(project categorical grants)으로 구성됨
- 특정보조금 중 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 공모사업과 유사한 제도이며 그 지급에 관하여 연방정부에 자유 재량권을 주는 보조금임
  - 모든 보조금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업 완료 후 감사를 받아야 함

### 2) 주 정부 공모사업의 절차와 운영

#### 주 정부 공모사업의 절차

- 공모사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특정보조금(사업보조금)의 경우 사업부서마다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주어짐

#### □ 사전절차

-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신청 절차 및 기한, 지급

가능범위, 지급대상, 지급방법, 감독방식 등을 포함하는 운영 사항을 고시함으로써 시작됨(윤태섭, 2015)

- 운영사항을 고시하고, 고시에 따라 보조사업자(하위정부)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함
- 신청하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주 정부 차원에서 신청사 작성 요령 및 검토사항에 대해 규정)

• 표 2-4 | 콜로라도 주 보조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심사 중점 사항  
(Colorado Common Grant Application Tips) •

10 Tips	고려 사항
조직 설립배경 (Organization Background)	조직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조직설립 시기, 설립자, 설립방식 및 조직변천에 대한 정보 제공
현재 조직 목표 (Organization's current goals)	조직 설립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재 조직 목표
현재 운영 사업 (Current programs)	조직의 임무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제안 사업 (Program or Project request only)	보조 사업에 지원하게 된 취지 또는 보조 사업을 제안하게 된 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사업 평가 방식 (Evaluation)	전반적 조직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 지원 또는 제안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방법
사업 운영 시 협력방안 (Collaboration)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상호작용
사업 운영수단 획득방안 (Inclusiveness)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자원인 인력, 위원회, 자원봉사자 등의 획득 방안
조직관리 방식 (Board / Governance)	관리자의 조직 관리방식 및 사업관리 위원회 실적 등을 포함한 조직 운영 효율성
자원봉사자 획득 (Volunteers)	자원봉사자 획득 방안
조직 발전 계획안 (Planning)	향후 3~5년 간 조직 발전과 관련한 계획안

출처 : Colorado Common Grant Application User's Guide, CO

□ 수시절차

- 특정보조금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하위정부는 개별사업에 대해 사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성과평가지표,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주민 수, 보조금 삭감 유무, 달성되지 않은 목표, 행정상 변동, 경비지출내역, 주목할 만한 성과를 포함함

□ 사후절차(성과감사)

- 특정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OMB가 제시하는 항목에 따라 실시되나 주 정부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OMB의 10 common grant audit issues의 경우 연방정부 보조사업자 관리를 위한 도구이었으나, 주 정부 단위에서의 보조사업자 관리 지침 작성에도 준용되고 있음

• 표 2-5 | 보조사업 성과 감사 지표(조지아 주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

서비스 영역	성과평가지표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세 이상 지역 노인 중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 부양자와 거주하는 비율, 요양원에 거주하는 비율</li> <li>• 55세 이상 지역 노인 중 교통 이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li> <li>• 55세 이상 지역 노인 중 ADL을 경험하는 비율</li> </ul>
노숙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자 수</li> <li>• 지난 12개월 동안 노숙경험이 있는 사람 및 가구원 수</li> <li>• 지난 12개월 동안 노숙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져야 했던 아동수</li> <li>• 빈곤인구</li> <li>•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 인구</li> <li>• 저당 채무자 수</li> <li>• 강제 퇴출 개인 및 가구원 수</li> </ul>
청소년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수</li> <li>• 0~17세 사이 아동 중 성장발달 저해 또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li> <li>• 5~12세 사이 아동 중 방과 후 보호자 및 도우미에 의해 돌봄을 받지 않고 방임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li> <li>• 고등학교 졸업 비율</li> <li>• 고등학교 자퇴 비율</li> </ul>

서비스 영역	성과평가지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SI 수급자 수</li> <li>• 특수교육을 받고 있거나 욕구가 있는 장애아동 수</li> <li>• 일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수</li> <li>• 성인 장애인의 취업률</li> <li>• 성인 장애인 중 생계유지 가능 소득을 얻는 비율</li> <li>• 빈곤선 아래에 있는 장애인 수</li> </ul>
HIV/A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발견자 비율</li> <li>• 보유자 수</li> <li>• 감염자 중 안전하고 안정된 거주지를 갖고 있는 비율</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률</li> <li>• 실업급여 수급률</li> <li>•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도 아니고 취업 상태도 아닌 청년 비율</li> </ul>

출처 : Human service grants application instruction manual, Fulton County, GA

## 주 정부 공모사업의 운영 : Florida Department of State

- 주 정부 보조금의 경우 일반적 절차보다는 각 사업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에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보조금에 대한 booklet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개요 및 신청절차, 대상 등을 설명(플로리다 주의 경우 각 Department(주 정부 부처; 우리나라 중앙행정 기관에 해당)별로 보조금 안내서를 발행함)
  - Florida Department of State(내무부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의 경우 사업부서별로 아래의 보조금을 운영함

-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Cultural and Museum grants, Culture Builds Florida grants
- Division of Historical resources: Small matching historic preservation grants, special category grants
- Di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construction grants

- booklet에는 보조금 명칭, 관련 법령, 지급대상, 지급절차 및 우선순위, 보조금 재원 및 매칭비율 등에 대한 개략적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아래 예시와 같음

**Cultural and Museum Grants Overview**  
**(General Program Support)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S. 265.286(3), F.S.**      **Chapter 1T-1.036, Florida Administrative Code**

Cultural and Museum Grants support the general program activities of an organization that is engaged in conducting, creating, producing, presenting, staging, or sponsoring multiple cultural exhibits, performances, educational programs, or events during the grant period. General Program Support funding is not intended to fund indirect or overhead expenses.

**Eligibility**

- Florida not-for-profit organizations and public entitie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entities of state government, school districts, community colleges, colleges or universities engaging in cultural programming such as museums, local arts agencies, state service organizations, performing art centers, orchestras, dance companies, theater groups and other organizations, to promote access, diversity and excellence in cultural activities are eligible to apply. The organization's mission must directly support arts and cultural programming.
- A single organization may submit only one (1) General Program Support OR one (1) Specific Cultural Project grant application for each grant period.

**Application and Ranking**

- Applications were submitted online between April 1 and June 3, 2019.
- Eligible applications were ranked by panels in 25 separate meetings in August and September 2019 organized by artistic discipline (i.e. visual arts, music, dance, theatre, museums).
- Panels are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typically include practicing artists, educators, patrons, arts administrators, museum professionals, board members, experts from national arts organizations and qualified professionals in cultural disciplines.
- Panelists use a rubric to score applications from 0 to 100, and applications must earn a minimum average score of 80 to be recommended for funding.
- Panel recommendations are reported to the Florida Council on Arts and Culture, and applications recommended for funding by the Council are merged into one list ranked by average score. This list is submitted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review and approval and the approved list is provided to the Legislature per Section 265.286, F.S.

**Funding Source** is General Revenue

- If the list is fully funded, all grantees receive their full request amount; if the appropriation is less than the request, the award amounts are determined by a score-based formula that proportionally distributes the appropriation to all projects on the list.

**Awards** up to \$150,000

- Grantees must provide 1:1 match with up to 25% in-kind (donated goods or services); Rural Areas of Opportunity (RAO)/Rur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REDI) applicants are not required to provide cash match but must show 50% match of in-kind goods or services.
- The grant period will be July 1, 2020 to June 30, 2021. All grant activities must be completed within the grant period and all grant and match funds must be expended within the fiscal year appropriated.

출처 : <https://files.floridados.gov/media/702491/dos-grant-booklet-2020-21.pdf>

- 특징적으로 매칭 비율에 대한 사항이 지원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The Rur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REDI)” 사업의 경우 25:75의 비율로 적용되었음
-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정보를 바탕으로 Florida Historical Commission(플로리다 역사 위원회)가 총점 100점으로 평가하고,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함

- 심사는 부서심사(Division of historical resources)와 위원회심사(Florida historical commission)으로 이루어짐
  - 부서심사는 기술평가 위주로 시행되며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적격성 위주로 이루어짐
  - 위원회심사는 3가지 영역의 평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모 사업(small matching grant)과 관련된 지원 자격, 사업유형, 선정, 매칭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지원 자격
    - ◆ 카운티, 도시정부, 교육구, 주립대학 또는 주정부 기관 및 비영리 조직과 같은 공공기관
  - 사업유형
    - ◆ 역사적, 고고학적 자원을 조사 및 발굴하는 사업
    - ◆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상태평가, 리모델링, 보존 사업 등
    - ◆ Heritage education, Historical marker 지원 프로그램 등
  - 사업자 선정
    - ◆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보조금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 ◆ 평가기준으로는 역사적 중요성, 위험, 제안된 사업의 적절성, 조직의 관리능력, 기술 및 재정자원의 적절성, 주정부 역사 보존 우선 순위와의 호환성, 교육 잠재력, 경제적 이익 및 결과 등
  - 매칭(matching)
    - ◆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 매칭을 해야 함
    - ◆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는 최대 USD 50,000임
    - ◆ 매칭금액 중 25%는 현금으로 보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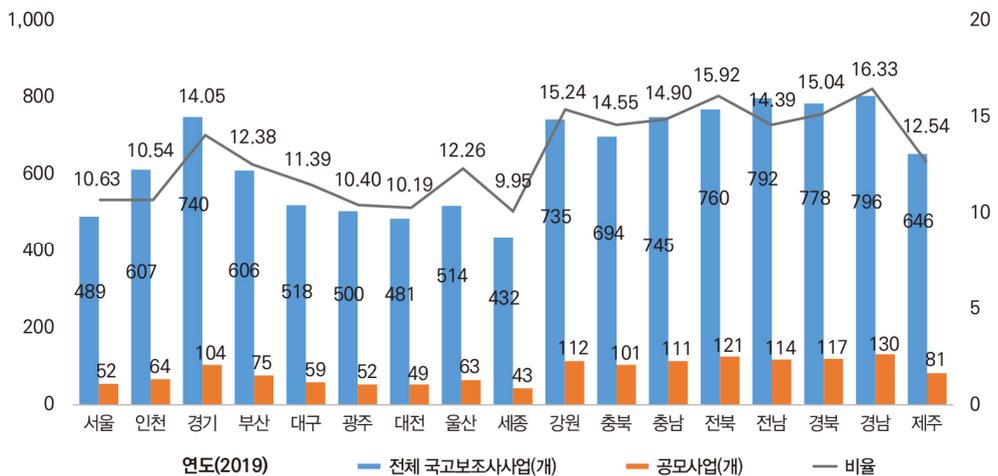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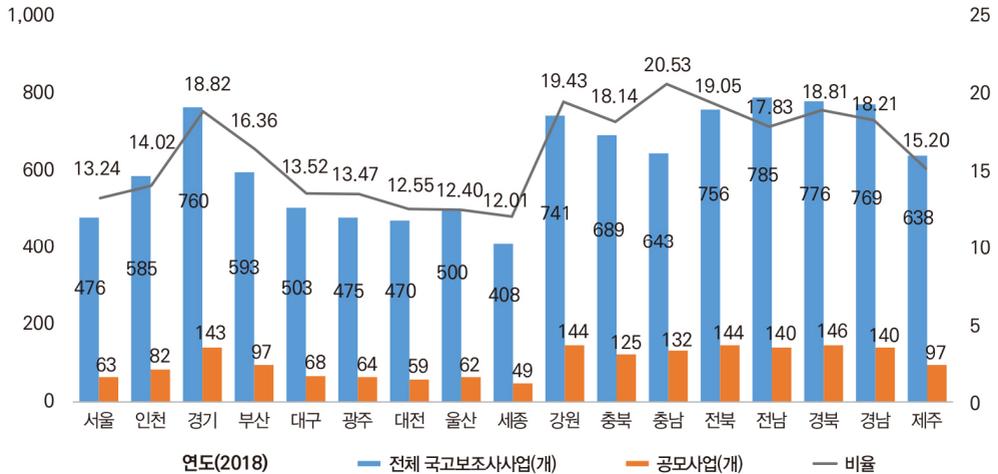
# III

## 대전광역시 국책 공모사업 실태분석

### 1. 현황 분석

- 먼저 2018~19년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및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냈음
  - 2018년도 기준으로 전남(785개), 경북(776개), 경남(769개) 순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 경북(146개), 강원·전북(144개), 경기(143개) 순으로 나타났음
  - 2019년도 기준 국고보조사업 수는 경남(796개), 전남(792개), 경북(778개) 순이며, 공모사업의 경우는 경남(130개), 전북(121개), 경북(117개) 순으로 시행되고 있었음
  - 경북, 경남 등이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 또한 경남(2018년 18.21%, 2019년 16.33%), 경북(2018년 18.81%, 2019년 15.04%)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전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는 470개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408개)에 이어 하위 2위에 해당하며, 공모사업 수도 59개로 세종(49개)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2019년 국고보조사업 수는 481개로 절대적인 사업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432개)에 이어 가장 적은 수이며, 공모사업의 수도 49개로 세종(43개)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림 3-1 | 2018-2019 전체/공모 국고보조사업의 수, 비율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지역별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은 단일 국고보조사업임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참여하기 때문에 중복 계수됨
- 또한 2개 연도에 해당하는 연속사업도 포함됨
-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순위대로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 2019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32.33%로 전년 대비 0.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전체 국고보조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 비율은 감소하였기 때문이지만 절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방비 금액은 증가하고 있음
-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충남의 경우 1.62%p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대전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비는 1조 7,888억 원이고, 지방비는 5,765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32.23%로 나타남
-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45.78%), 세종(37.99%), 울산(34.8%), 강원(33.25%)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19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비는 2조 0,857억 원이고, 지방비는 6,619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률은 31.74%로 나타남
- 이는 전년대비 0.49%p 감소한 수치이나, 절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는 늘어났음

• 표 3-1 | 2018~19년도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

(단위 : %)

	2018		2019	
	지방비 부담률	지역	지방비 부담률	지역
1	45.78	서울	43.36	서울
2	37.99	세종	36.87	세종
3	34.8	울산	34.18	울산
4	33.25	강원	33.49	강원
5	<b>32.23</b>	<b>대전</b>	33.35	충북
6	32.1	충북	32.8	충남
7	31.88	경남	32.11	전북
8	31.41	전북	31.97	경남
9	31.18	충남	31.89	경북
10	31.04	광주	31.84	전남
11	30.7	경북	<b>31.74</b>	<b>대전</b>

	2018		2019	
	지방비 부담률	지역	지방비 부담률	지역
12	30.56	전남	31.04	광주
13	30.35	경기	30.65	경기
14	30.23	인천	30.32	제주
15	30.15	제주	28.82	대구
16	29.01	대구	27.96	인천
17	29	부산	27.21	부산
평균	32.45		32.33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 2019년도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44.50%로 전년 대비 1.7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전년도 대비 공모사업 국고보조비가 절대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전년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한 광역자치단체는 총 5곳이며, 2019년 기준으로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순임
  
- 대전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공모사업비는 1,112억 원이고, 지방비는 514억 원으로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46.27%임
  - 광역자치단체 중 9위에 해당하며 전체 광역지자체 평균인 46.29%에 근접한 수치임
  - 2019년 기준으로 공모사업비는 1,320억 원이고, 지방비는 615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률은 46.57%로 나타남
  - 이는 전년대비 0.3%p 증가한 수치이며, 광역지자체 평균인 44.50%보다 높은 비율로 부담률 순위는 5위로 상승하였음

• 표 3-2 | 2018~19년도 공모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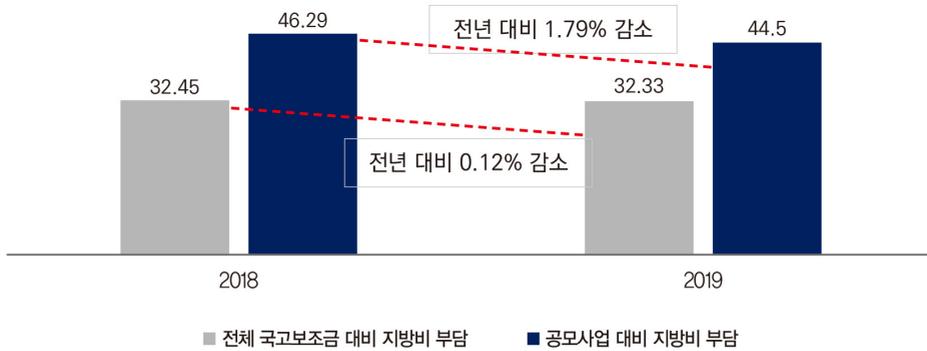
(단위 : %)

	2018		2019	
	지방비 부담률	지역	지방비 부담률	지역
1	52.68	서울	50.43	서울
2	48.92	인천	48.32	제주
3	48.01	울산	47.88	대구
4	47.55	경남	47.4	광주
5	47.45	부산	<b>46.57</b>	<b>대전</b>
6	47.02	충남	46.46	세종
7	46.7	제주	45.84	부산
8	46.31	전북	44.35	인천
9	<b>46.27</b>	<b>대전</b>	43.69	울산
10	45.65	강원	43.53	강원
11	45.16	경북	42.85	전북
12	45.05	대구	42.51	경북
13	45.04	경기	41.71	경기
14	44.75	광주	41.62	충남
15	44.68	충북	41.59	충북
16	42.9	세종	41.24	경남
17	42.84	전남	40.44	전남
평균	46.29		44.50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지방비 부담률만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하여 지방비 부담률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매년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앞의 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2018~19년 만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비 부담이 집중되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대체로 절대적 금액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총사업비 대신 지방비 부담률 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담 정도를 살펴야 함

• 그림 3-2 | 2018~19 지방비 부담률 변화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재구성

- 마지막으로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책 공모사업을 부처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먼저 100억 원 이상 부처별 공모사업을 살펴본 결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순이었으며, 평균 국비 보조율의 경우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림청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평균 공모사업의 보조율이 적게는 44%에서 많게는 70%까지로 50%를 상회하는 부처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표 3-3 | 100억 원 이상 부처별 공모사업비 •

(단위: 천 원)

부처	국비	지방비	2019 합계	평균 : 보조율
고용노동부	124,730,300	34,910,356	159,640,656	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00,000	5,300,000	10,600,000	50%
국토교통부	873,525,000	711,671,215	1,585,196,215	53%
농림축산식품부	731,914,000	513,718,505	1,245,632,505	56%
문화재청	16,760,000	16,760,000	33,520,000	50%
문화체육관광부	333,153,000	284,411,244	617,564,244	44%
보건복지부	97,566,000	75,519,255	173,085,255	53%
산림청	52,924,000	36,573,623	89,497,623	62%

부처	국비	지방비	2019 합계	평균 : 보조율
산업통상자원부	31,600,000	37,377,779	68,977,779	47%
여성가족부	6,334,000	4,057,500	10,391,500	61%
중소벤처기업부	128,687,000	77,394,971	206,081,971	57%
해양수산부	257,212,000	152,507,005	409,719,005	52%
행정안전부	280,021,000	305,000,851	585,021,851	49%
환경부	60,399,000	46,660,000	107,059,000	67%
총합계	3,000,125,300	2,301,862,304	5,301,987,604	55%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경기 및 경북, 전남, 경남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4 | 지역 별 100억 원 이상공모사업 건수 •

(단위 : 건)

지역/연도	2018	2019
서울	4	5
인천	2	4
경기	10	14
부산	9	7
대구	5	4
광주	3	4
대전	3	4
울산	3	2
세종	1	1
강원	4	6
충북	2	2
충남	5	7
전북	7	10
전남	12	13
경북	11	14
경남	10	12
제주	3	6
합계	94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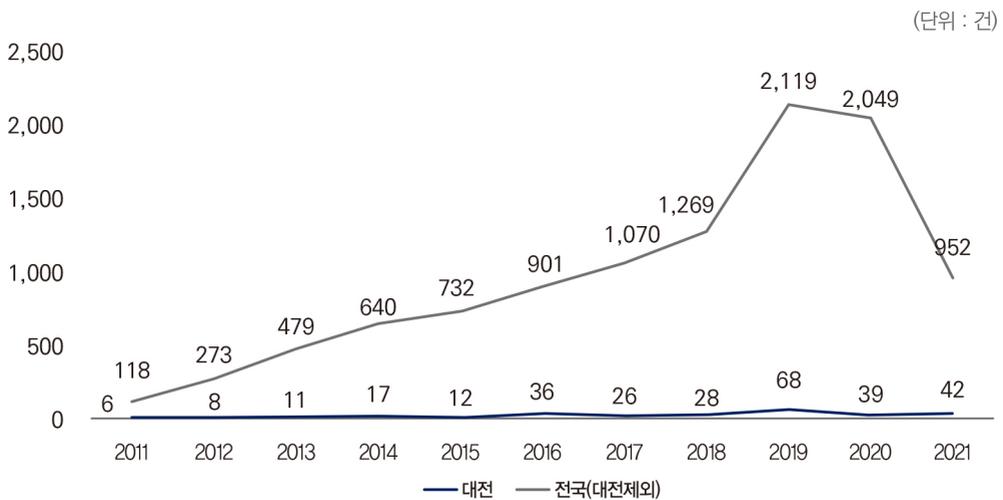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2. 핵심 이슈 분석

- 언론 분석을 통해 국책 공모사업의 핵심 이슈,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언론을 공모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대부분 공모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진행됨
- 국책 공모사업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방향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 동향을 분석함
  - 신문기사는 정보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정의, 인과관계 해석, 평가 등의 프레임을 구상함(Reese, 2001)
  - 공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프레임은 정책 결정이나 기관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지방자치단체 정치인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책 공모사업의 유치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예산확보의 수단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인식되므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시민에게 정보전달을 통한 행정 만족 및 지지 확보(서현식·송인국, 2011)를 위해 선정 시 대부분 언론 홍보를 실시함
  - 인터넷 신문의 발달로 신문은 여전히 중요한 정보의 전달 통로라는 점과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전국 종합일간지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인터넷 신문 포함)까지 포함하여 언론동향을 살펴봄
- 공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1년부터 현재(2021년 9월)까지 대전을 중심으로 국책 공모사업에 관한 신문보도는 293건(중복 제외)임
  -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하여 전국종합일간지 및 지역신문 기사 원문 웹크롤링 실시 후, 중복을 제외한 293건에 대하여 기사 내용 변화를 살펴봄
- 보도시기에 따른 기사 건수는 2011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대전의 경우 2011년 6건에서부터 2016년 36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해 보도량이 다소 감소함

- 2019년에 6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뒤 다시 증가세를 보임
- 2017년과 2018년 동안 대전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국책공모 관련 보도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전은 관련 보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그림 3-3 | 연도별 보도기사 건수(2011~2021) •



출처 : 빅카인즈(www.bigkinds.com)

- 보도목적에 따라 기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보도가 전 기간에 걸쳐 80.55%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동시 사용된 단어를 통해 언론보도의 목적이 홍보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국책 공모사업 선정 및 유치를 위한 노력 정도를 홍보하는 긍정적인 보도내용이 전체 293건 중 236건으로 80.55%를 차지하였으며, ‘활기’, ‘확보’, ‘투입’, ‘발전’, ‘어려움 해결’, ‘활성화’, ‘탄력’과 같은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었음
  - 사업 유치 실패 또는 철회와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는 26건으로 8.87%를 차지하였고, ‘우려’, ‘부작용’, ‘무산’, ‘불신’, ‘질타’, ‘부재’, ‘행정력’, ‘행정미숙’과 같은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었음
  - 기타는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국책 공모사업 일정 알림과 관련한 보도 또는 공모사업 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전체의 10.58%에 해당함

- 기타의 경우에도 여러 신문사에서 동일한 기사제목이 나타나고 보도 주체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본문에 서술한 것으로 미루어 전반적으로 보도 주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사 내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6가지로 구분 가능하며, 선정과 관련한 홍보 유형이 75.7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함
  - 국책 공모사업 선정을 홍보하는 기사가 전체 293건 중 222건으로 75.77%에 해당하고, 대표적인 기사는 2014년 7월 8일에 보도된 “대전시, 국비사업 40억 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유치”이며, 해당 공모의 규모를 밝히면서 청년창업자 지원이 지역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사업 유치 실패 및 철회를 비판하는 기사가 30건으로 10.24%에 해당하고, 대표적인 기사는 2018년 5월 17일 보도된 “대전시 잇단 행정미숙 질타 목소리 의료관광 공모 사업 탈락”이며, 공모사업 탈락의 원인을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계획서 제출로 파악하고 행정력 증진이 필요함을 알렸음
  - 2019년 10월 8일자 보도에서도 “대전시 정부공모사업 연속 탈락 전략 부재...4차 산업혁명특별시 명성 무색”이란 제목과 함께 공모사업 연속 탈락에는 공무원들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자기반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표 3-5 | 내용유형별 기사 분류(2011~2021) •

유형별	홍보 (선정관련)	비판	영향력 (제도개선)	노력전달	내부 인센티브	기타	합계
건수(건)	222	30	20	15	1	5	293
비율(%)	75.77	10.24	6.83	5.12	0.34	1.71	100

- 국책 공모사업 제도 변화를 촉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사가 20건으로 전체의 6.83%에 해당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노력을 나타내는 기사가 15건으로 5.12%이고,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기사가 1건으로 0.34%에 해당함

- 그 외 공모사업 시작을 알리거나 기간을 전달하는 사실보도는 기타에 해당하며 5건으로 1.71%임
- 특히, 2019년부터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준비사항을 홍보하는 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1년 2월 18일에 보도된 “대전 유성구, 국비확보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총력” 기사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하는 보고회,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표 3-6 | 내용유형별 주요 기사 목록 •

유형	기사 제목
홍보(선정관련)	대전시, 올해 16억 원 규모 바이오융합산업 사업화 지원
	이장우 의원, 국토부 공모사업 공사비 23억 2,000만 원 확보
	대전시, 생활체육시설 국비 134억 원 확보
	대전시, 국비 공모사업 연이어 선정 미래산업 ‘탄력’
비판	번번이 대전시 중기부 공모사업 탈락에 과학기술계 우려
	대전시 잇단 행정미숙 질타 목소리 의료관광 공모사업 탈락
영향력(제도개선)	국가 공모사업 전면 개선돼야
	“국가공모사업 비수도권 가점제도 반영하라” 정부, 비수도권 외침 들을까
내부인센티브	대전 유성구,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대응
노력전달	박OO 대전시 대덕구청장 “각종 공모사업 지속·적극적으로 도전해야”
	市, 국가공모사업 실무전담팀 가동
기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접수 받는다

### 3. 선정기준 분석

- 공모사업이 지역의 인프라와 높은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재정력이 높은 지방정부에 대한 선정비율이 높다는 인식이 존재함으로 실제 수도권에 공모사업이 집중되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선정기준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검토해야 함

- 이에 선정기준 분석을 두 파트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첫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와 비수도권(이외 14개 광역 단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 둘째, 실제 공모사업 공고 내용을 분석하여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분석하는 것임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공모사업 선정현황

-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 국고사업 및 공모사업 수와 비율 평균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성하는 자치단체 수를 고려하면 공모사업의 사업 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도권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전체 국고보조 평균 사업 수는 607개에서 612개로 증가하였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96개에서 73개로 평균 사업 수가 감소하였음
  - 비수도권의 경우 2018년도 625개, 2019년도 643개로 평균 사업 수가 증가하고, 공모사업 수는 105개에서 88개로 감소하였음
  - 대전의 경우 2018년 470개, 2019년 481개로 증가하였고, 공모사업 수는 59개에서 49개로 감소하였음.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 대비 공모사업 수 비율은 2019년 10.19%로 전년에 비해 2.36%p 감소함
  - 2018년과 2019년 모두 전체 국고보조 평균 사업수 대비 공모사업 수 비율은 비수도권(2018년 16.77%, 2019년 13.64%) > 수도권(2018년 15.82%, 2019년 11.98%) > 대전 (2018년 12.55%, 2019년 10.19%) 순서로 나타남

• 표 3-7 | 수도권/비수도권 국고보조사업의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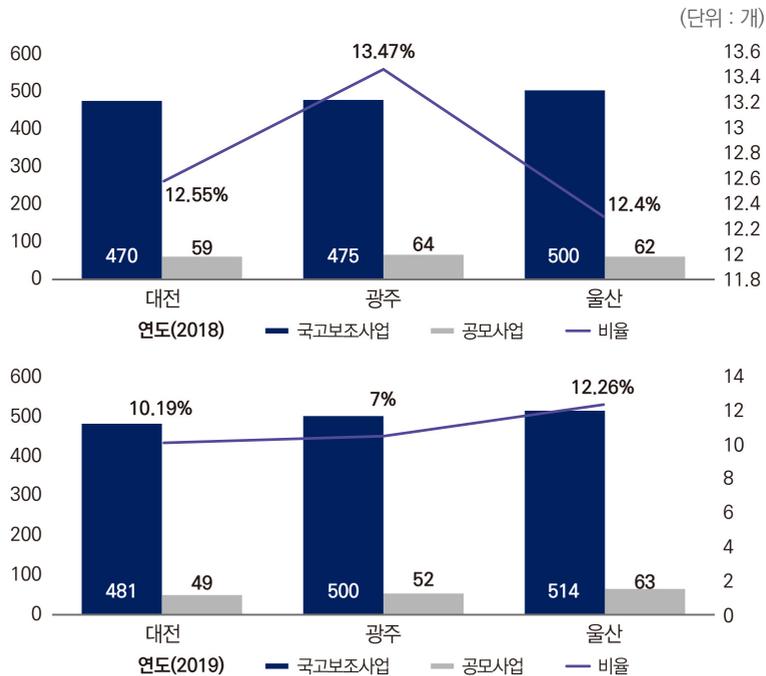
(단위 : 개, %)

구분	2018			2019		
	전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비율	전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비율
수도권	607	96	15.82	612	73	11.98
비수도권	625	105	16.77	643	88	13.64
대전	470	59	12.55	481	49	10.19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인구와 재정규모에 비례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대전과 인구, 재정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와 비교를 실시함
  -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구 200만 명 미만 광역시를 기준으로 광주, 울산과 유사단체임
  - 대전은 광주(2018년 475개, 2019년 500개) 및 울산(2018년 500개, 2019년 514개)과 비교하여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가 2018년 470개와 2019년 481개로 모두 적으며, 공모사업 수의 경우 2018년은 유사단체 간 비슷한 사업 수를 보였지만 2019년은 감소함
  - 대전, 광주, 울산 모두 비수도권에 속하는 지자체이므로 비수도권 평균과 비교하면 2018년과 2019년 모두 전체 국고보조사업 수, 공모사업 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유사단체 간 사업 수 비율을 비교하면 2018년은 광주(13.47%) > 대전(12.55%) > 울산(12.4%) 순서이며, 2019년은 울산(12.26%) > 대전(10.19%) > 광주(7%) 순서로 나타나지만 비교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차별성이 나타날 만큼의 수치라고 보기 어려움

• 그림 3-4 | 유사단체 간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 수 비교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다음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대전의 지방비 부담률은 32.33%임
  - 수도권외의 경우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전년에 비해 35.45%에서 33.99%로 1.46%p 감소함
  -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31.81%에서 31.97%로 0.16%p 증가함

• 표 3-8 | 수도권/비수도권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 •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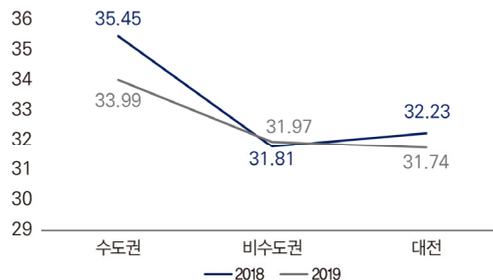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 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 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수도권	51,721	29,227	80,948	35.45	60,531	32,422	92,953	33.99
비수도권	24,450	11,070	35,520	31.81	27,109	12,496	39,605	31.97
대전	12,123	5,765	17,888	32.23	14,238	6,619	20,857	31.74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대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국고보조금액은 12,123억 원에서 14,23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입된 지방비는 5,765억 원에서 6,619억 원으로 증가함
-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은 32.23%에서 31.74%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 > 대전 > 비수도권에서 2019년에는 수도권 > 비수도권 > 대전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5 | 국고보조 대비 지방비 부담률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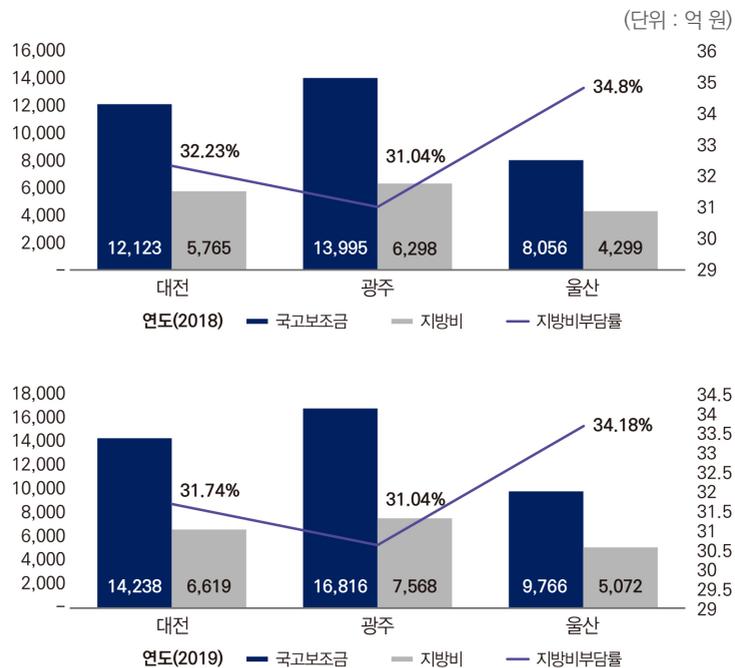
(단위: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대전과 유사단체인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국고보조 금액과 지방비 부담률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대전은 국고보조 및 지방비 금액이 울산과 비교하면 2018년과 2019년 모두 크지만 광주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임
  - 대전의 경우 지방비 부담률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울산 > 대전 > 광주 순서로 유사단체인 광주보다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률이 높은 편임

• 그림 3-6 | 유사단체 간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 금액 비교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공모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9년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비 부담률은 44.5%임
  - 수도권외의 경우 45.50%, 비수도권의 경우 44.28%로 전체 평균 대비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과 같이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2018년 48.88%에서 45.50%로 3.38%p 감소하였음

- 비수도권의 경우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이 2019년 기준 44.28%로 2018년에 비해 1.46%p 감소하였음
- 평균치보다 높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인 것으로 나타남

• 표 3-9 | 수도권/비수도권 공모 국고보조금 대비 지방비 부담률 •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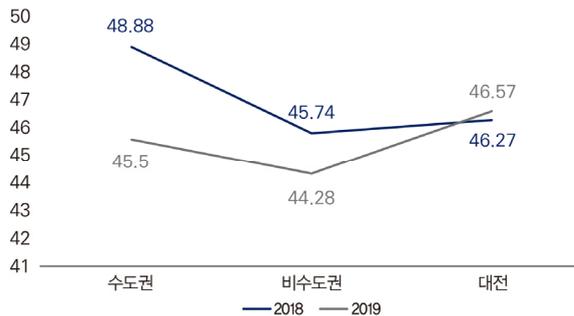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공모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 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공모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총 국고보조 사업비	지방비 부담률
수도권	1,261	1,144	2,405	48.88	1,439	1,140	2,579	45.50
비수도권	1,280	1,081	2,361	45.74	1,616	1,235	2,851	44.28
대전	597	514	1,112	46.27	705	615	1,320	46.57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대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전체 공모 국고보조금액은 597억 원에서 70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입된 지방비도 514억 원에서 615억 원으로 증가함
- 대전의 지방비 부담률은 46.27%에서 46.57%로 0.3%p 증가하여 비수도권 평균 지방비 부담률이 감소세와 반대인 모습을 보임. 2018년은 수도권 > 대전 > 비수도권 순서에서 2019년 대전 > 수도권 > 비수도권 순으로 지방비 부담률이 상승하였음

• 그림 3-7 | 공모 국고보조 대비 지방비 부담률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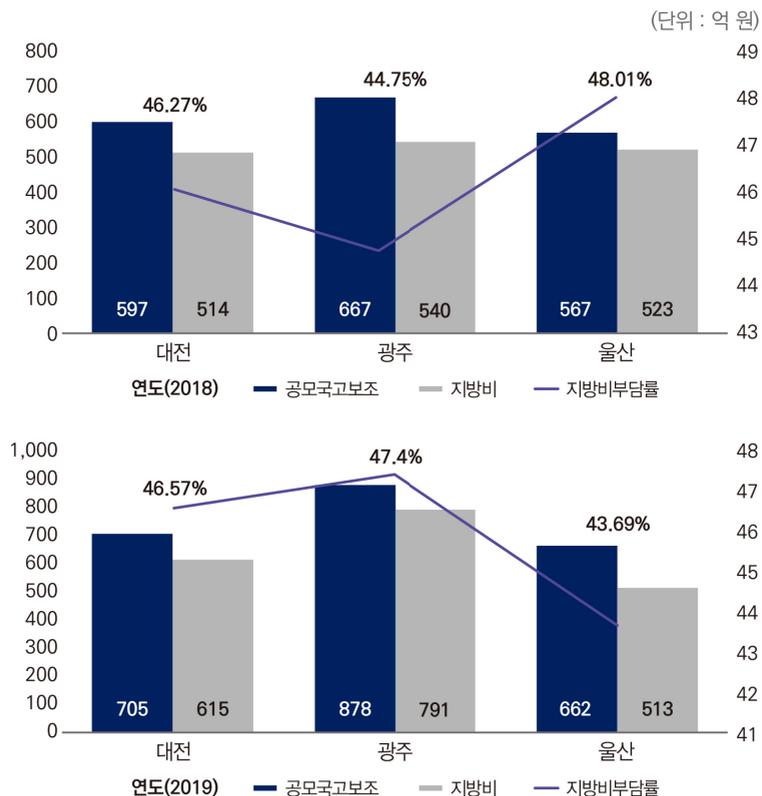
(단 위: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대전과 유사단체인 광주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공모 국고보조 금액과 지방비 부담률에 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대전은 공모사업 금액의 경우 광주 및 울산과 비교하여 2018년과 2019년 모두 광주 > 대전 > 울산 순서로 나타나며, 2018년 대비 2019년 공모사업 금액의 증가 폭은 광주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지방비 부담금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모두 광주 > 대전 > 울산 순서이고, 2018년 대비 2019년 지방비 부담액의 증가폭이 광주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대전의 경우 공모 국고보조 대비 지방비부담률은 2018년 기준으로 울산 > 대전 > 광주 순서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광주 > 대전 > 울산 순서로 변화가 나타났음
  - 대전은 유사단체 중에서 공모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률 변화폭이 가장 작게 나타남

• 그림 3-8 | 유사단체 간 공모 국고보조 및 지방비 금액 비교 •



출처 : 행정안전부(2018, 2019) 내부자료

## 공모사업 심사기준 분석

-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국책 공모사업 지원 현황 및 심사 기준을 살펴보고자 함
  - 본 분석은 대전광역시가 6년간 공모사업에 지원 또는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발주 부처, 평가항목, 수행 방식, 지방비 부담 비율 공개 등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정리 하였음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가 지원한 67개의 사업 중 사업비 규모 확인이 가능한 44개의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표 3-10 | 공모사업의 수 및 세부사항 •

구분	총사업 (개수)	주최 (부처)	평가항목여부		배점여부		사업유형		
			○	×	○	×	하드	소프트	혼합
전체	44	11	37	7	30	14	26	12	6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도시지역개발분야에서 사회기반시설은 사업내용에 따라 하드인프라(hard infrastructure), 소프트인프라(soft infrastructure)로 구분가능하며, 이를 차용하여 사업방식을 하드 사업, 소프트사업, 혼합사업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함
  - 하드인프라는 도로, 철도시설, 에너지, 수자원, 항만, 공항과 통신시설과 같은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개발, 기반구축과 관련한 물적자산을 의미(ADB, 2000)하고, 소프트 사업은 하드사업의 설비와 제도의 효용을 높이는 인력의 교육과 조직화, 도시계획, 환경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과 같은 제도 또는 행동 요소(ADB, 2014)들로 정의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소프트인프라는 각종 설비나 장비 등을 지칭하는 하드인프라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자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식기반 설계 및 운영방식(이재호, 2004)을 의미하며, 휴먼인프라 및 사회자본 운용과 관련한 정책, 행정자원, 운용 노하우로도 해석 가능함

- 공모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하드인프라를 설치하는 하드사업과 교육, 복지와 같은 소프트웨어인프라를 개발하는 소프트사업, 그리고 물적·인적 인프라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함한 혼합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가 지원한 공모사업의 주최는 과학기술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총 11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한 공모사업의 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로 10개씩이었음
  - 하드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 주최 사업에 지원했으며, 소프트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통신부 주최 사업에 지원했고, 혼합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최가 대부분이었음

• 표 3-11 | 중앙부처 주최 공모사업 수 •

부처명	하드사업	소프트사업	혼합사업	공모 사업 수
과학기술통신부	1	3		4
국토교통부	5			5
문화체육관광부	1			1
보건복지부	1			1
산림청		2		2
산업통상자원부	9	1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1	2
중소벤처기업부	3	1		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3
행정안전부	1	4	5	10
합계	26	12	6	44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건설 등과 관련한 하드사업이 26개,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사업이 12개, 혼합사업이 6개로 집계됨

- 하드사업의 경우, 세 가지 사업유형 중 가장 많은 지원사업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2021까지 지원사업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소프트사업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소프트와 하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혼합사업도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 표 3-12 | 사업유형과 연도에 따른 구분 •

사업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하드사업	1	1	4	4	7	9	26
소프트사업		1		5	4	2	12
혼합사업				2	3	1	6
합계	1	2	4	11	14	12	44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사업유형과 사업비 규모에 따라 공모사업을 구분하면 100억 원 이상 사업이 총 11개,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이 총 22개, 10억 원 미만 사업이 총 11개로 대부분 사업이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음
  - 하드사업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은 10개 사업,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은 14개, 10억 원 미만 사업은 2개임
  - 소프트사업을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은 1개 사업,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은 5개, 10억 원 미만 사업은 6개임
  - 혼합사업은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없으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은 3개, 10억 원 미만은 3개 사업임

• 표 3-13 | 사업유형과 사업비규모에 따른 구분 •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하드사업	20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선정	2018년 충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신청	시내버스 승객안전사고 zero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수소전기 부품 원스톱시험·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
	탄소배출 저감형 고효율 중대형개질기 기술개발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2019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2018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2021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2021년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2021년 해외 수소기반대중교통인프라기술 개발사업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2016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	
	202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		
	2019년 바이오가스활용수소융복합충전소사업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2차		
소프트사업	2020년도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사업	2020년 추진과제(신규·확산) 주관기관 공모	2021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지원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사회현안지능정보화과제 공모
		2021년 사회현안지능정보화과제 공모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2020년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자격 확인 재정지원 1	2020년 전국 외국인근로자풋살대회 개최 지원
		2020년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2017년 녹색도시우수사례공모
혼합사업			2019년 녹색도시우수사례공모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1(다문화이주민+센터)	2019년 저출산대응모델육성공모사업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2 (집중거주지역기초인프라조성사업)	2019년도 ICT-문화융합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2020 자치단체협업지원사업	2021년 지자체저출산대응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합계	11	22	11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심사기준 또는 평가항목을 제시한 사업은 제시한 사업이 37개 사업, 그렇지 않은 사업이 7개로 15.91%의 사업이 평가항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드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 사업 10개 중 9개 사업이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 15개 중 13개, 10억 원 미만 사업은 2개 중 1개 사업이 선정기준을 제시함
  - 소프트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 사업 1개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었고,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 4개 중 3개, 10억 원 미만 사업은 6개 중 5개 사업의 선정기준을 확인함
  - 혼합사업의 경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 3개와 10억 원 미만 사업 3개 모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었음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사업”은 평가항목으로 지역스토리텔링의 차별성, 활용 가능성과 문화소외지역 여부를 제시하였고, 하드사업 대부분 지역산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지자체 간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기보다 선정 시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장치이자 효과성을 높이려는 방안에 가까움
-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및 국고 보조 균형성을 선정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이 유리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분석사업 중 1개 사업에 불과하였음
- 모든 유형의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자체의 재원조달 방안 및 지방비 매칭 규모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사업유형 간 차별점은 하드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 가능성과 계획성이 공통적인 기준이었고, 소프트사업과 혼합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의 효과성과 지자체의 의지가 빈번하게 등장함

• 표 3-14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제시 구분 •

사업유형	사업명	100억 원 이상	
		선정기준	
하드	20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선정	지역산업 적합성	지역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시급성
		지역사업기획 타당성	지역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기 구축장비활용도
			기존사업과 중복성
			산업부 지역 정책 부합성
		지역사업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부합성
			파급효과 및 경쟁력강화
			기술성
소프트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연구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안전관리방안적정성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입지 적합성	수소산업 연관성, 부지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전략, 사업관리방안, 중장기발전방안	
	사업수행능력	기관성격 및 유사사업수행실적,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운영방안의 합리성	
	지자체 추진의지	지자체의 재원조달계획 및 지원내용, 주민수용성	
2018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 2019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 2021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의 지속성 및 구체성	숲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의 선행여부(선정 후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용권리 확보 여부		
	접근성, 개방성, 이용성, 재정자립도		
	전체 사업비 중 식재비 비중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용도와의 적합성		
	사업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총괄) 내용의 충실성과 타당성		
	※ 사업제안서(총괄)에 「조성 후 5년간의 사후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 타당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정부예산의 지원 필요성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	부지확보 여부	
		수소버스 연계 전략의 적절성	
		수소충전소 연계 전략의 적절성	
		수소생산·저장·운송 설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 조직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전문성, 수행 인력확보 및 역량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자립화 및 기대효과	자립화 및 기대효과	자립화 운영방안 해당 지역 수소산업 기여도
2021년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 기대효과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지역산업 적합성	지역사업의 적합성	대상 산업의 지역적 적합성, 성장성
	지역사업 기획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사업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사업구성, 추진체계의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지역참여도 및 지방비부담	수요조사 등 기업기관의 참여정도, 매칭규모, 절차준수 성실도
		기 구축장비활용도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장비기능 개선노력
		기존사업과 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및 차별성 여부
	지역사업 정책성	산업부 지역정책부합성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지역균형발전부합성 및 국고보조의 균형성
파급효과 및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경쟁력 제고,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2018년 충남권역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신청	운영역량 및 건립환경	의료기관 평가 성적	
		의료인력 및 치료사 수	
		미충족 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	
		재활병원 시너지 효과	

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운영 계획	비전 및 장기 발전 방향
		운영계획 타당성
		재정운영계획의 안정성
	조직 및 인력수급계획	의료인력 수급계획
		다분야 진료연계 체계 구축
	시설 및 장비	부지 확보 계획의 타당성
		시설계획의 타당성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 차별되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계획
		지역사회 재활의료 자원과의 연계 수행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의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의료기관의 예산 지원 및 사업추진 의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현장평가	자료의 사실성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의 정확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안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파급 효과 정도
	사업추진 의지	단체장과 행정의 지원 의지
서면평가	사업목표의 적절성	명확한 사업 추진 목표의 설정
		지역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차별성 확보
		사업의 규모 및 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절성
	기대효과	지자체의 사업진행 역량 및 의지
		지역발전의 잠재력 및 성장 가능성
	주변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정부지원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추진체계	합리성 및 운영방안의 효율성	
		관련 이해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노력	
	가점	장기미집행 조성 면적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 타당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정부예산의 지원 필요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부지확보 여부
			수소버스 노선 및 충전소 연계 전략의 적절성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수소추출·저장·운송 설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전문성, 수행 인력확보 및 역량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지자체의 관련제도 개선정도 등	
자립화 및 기대효과		자립화 및 운영방안 해당 지역 수소산업 기여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사업 필요성	밀집지역 현황 진단의 적절성	
		1-1. 현황 진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는 지정 가능성 등 낙후 정도
	사업 추진전략	1-2. 사업 필요성	스마트 플랫폼 조성 목표 및 필요성 기업지원시설 등 인프라 구축 필요성
		2-1. 사업의 실현	사업계획, 실행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2-2. 앵커기업 투자	앵커기업 투자 규모 및 역할의 적절성
	2-3.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등 실행전략의 적절성 스마트플랫폼 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2-4. 사업추진 의지	지방비 매칭 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공간 조성·운영 전략	3-1. 접근성	조성지의 입지 및 접근성 조성지 부지·시설 등 확보 계획
	3-2. 조성전략	스마트플랫폼 내 장비 구성 및 공간의 적절성 스마트플랫폼 조성 시 인근 지역과의 연계 전략
	3-3. 운영전략	산업부, 국토부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중장기 운영전략
지속가능성	4-1. 지속 가능성	사업 완료 이후 민간 참여 등 지속적인 확장성
	4-2. 파급 효과	플랫폼 조성을 통한 지역 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타 기관과의 연계 등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성적 파급효과
2021년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목표	최종연구개발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및 창의성
		단계별·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연구개발내용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내용·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연구개발내용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수행체계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 수산화연구성 등) 및 연구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신규인력 채용의지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연구개발성과 활용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	
	개발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 경험) 및 관리능력	
	연구윤리 수준	
2016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 만들기사업 & 202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 만들기사업	지역여건	지역스토리텔링의 차별성 및 활용가능성
		하드웨어 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 보유 여부 및 적합성
	사업계획 적절성	휴먼웨어 지자체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지역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자체연계 협력도 및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및 사업파급 효과정도
2019년 바이오가스활용 수소융복합 충전소사업	기술성	목표의 타당성 및 도전성 실증운영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1차 &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2차	추진 필요성	스타트업 타운 조성의 필요성
	공간전략	개방성 기존의 교통 인프라 또는 향후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

	집적화	(기업지원인프라) 후보지인근지역 혁신기업과 스타트업 분포현황, 연구개발전문기업 등 R&D인프라현황
		(생활형SOC)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지정현황 또는 향후 지정을 통한 타운 내 생활형 SOC 조성계획
		증장기적 관점에서 스타트업 타운과 지역개발과의 연계
운영전략	지속가능성	스타트업 및 지역혁신기업 유치 계획
	실현가능성	연구개발전문기업, 2nd부설연구소 등 혁신인프라 유치계획
	지자체 의지	대응자금(현금+현물의 규모)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의 적극성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그린 디지털화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절감방안, 친환경적 건축요소반영 등 친환경적 타운 조성방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타운의 디지털화 방안

1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지역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	사업계획의 구체성
	마이스산업의 활성화 기여도
	사업추진체계 적절성
	지자체 추진의지
	지역 마이스 현황

사업유형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소프트	2020년 추진과제 (신규·확산) 주관기관 공모	효과성	과업의 효과성
		공공/공익성	서비스 및 적용기술의 공공 필요성
			서비스 및 적용기술의 공익성
		파급성	정부/공공 등 기관활용도
			생태계조성 및 활성화
		추진의지 및 준비수준	자체부담금 투자의지(비율별 배점)
	추진여건 및 인프라 등 준비수준		
	실현가능성	과업의 이해도 및 구체성	
		적용기술의 적합성	
	2021년 사회현안지능정보화 과제공모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타당성
		사업수행내용의 적합성 차별성	사업수행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내용의 연계성, 차별성
		사업수행내용의 우수성	사회현안 해결서비스 적용기술도입 및 구현가능성
		서비스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	사업수행 및 종료 후 운영관리계획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자체 민간부담금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자부담금투자 등 사업비편당규모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결과활용 및 파급효과		성과홍보계획 및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수행협력을 위한 적극성	사업추진시 전문가활용, 협의체구성, 유관기관협력 등 적절성		
상생협력, 사회적가치구현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		
2020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확인 재정지원 1	적정성		
	적극성		
	효과성		

10억 원 미만		
사업명	선정기준	
2021년도 시군구 지역연구산업 육성(비R&D) 지원	연구산업 경쟁력	전통성 산업여건 중소기업 중심산업 지역특구 연관성
	사업내용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차별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내용의 연계성·차별성
	사업수행 내용의 우수성	사회현안 해결서비스 적용기술도입 및 구현가능성
	서비스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	사업수행 및 종료 후 운영관리계획 적정성
사회현안 지능정보화 과제공모	사업비 적정성	자체·민간부담금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자부담금투자 등 사업비편당규모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결과활용 및 파급효과	성과홍보계획 및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수행협력을 위한 적극성	사업추진 시 전문가활용, 협의체구성, 유관기관협력 등 적절성
	상생협력, 사회적가치구현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
	유치목적	
	예산집행계획(후원금 2천만 원)	
2020년 전국 외국인근로자 풋살대회 개최지원	대회운영방식	
	개최경력	
	지역 및 국제행사 연계	

2017년 도시우수사례공모	공통	조성관리 계획성	도시림 조성계획 수립
		도시숲사랑현장 캠페인 실행	도시숲사랑현장 캠페인 실행여부
	도시숲조성	규모 및 시설물관리	도시숲 면적 안내표지판, 수목표찰 설치
		네트워크 구축	주변산림과의 연결성
		접근성	인근주거지역과의 접근성
	사회문화적기능	주민교류	지역문화행사
		이용활성화	도시숲 프로그램
	경관적기능		친환경성
			경관위해성
	유지관리		관리적절성
			시민 등 참여수준
	생태적 건강성	가로수 자체의 안정성	생육상태
			다양성
		주변 녹지와와의 연결성	생육환경
	사회문화적기능	대표성	녹도조성
			주변 대규모 녹지와 연결성
		안정성	수종 통일성
	경관적기능		가로수보호시설
		가시성	
유지관리		경관평가	
		관리적절성	
2019년 도시우수사례공모	도시숲조성	시민 등 참여수준	
		규모 및 시설물관리	도시숲 면적 안내표지판, 수목표찰 설치
	사회문화적 기능	기반여건	도시숲 조성 기반
		주민교류	지역문화행사
		이용활성화	도시숲 프로그램
경관적기능		친환경성	
		경관위해성	

	유지관리	관리적절성 시민 등 참여수준
	생태적 건강성	생육상태 다양성 생육환경
	가로수 자체의 안정성	녹도조성 주변 대규모 녹지와 연결성
	주변녹지와와의 연결성	수종 통일성 가로수보호시설
	사회문화적 기능	가시성 경관평가
	경관적 기능	관리적절성 시민 등 참여수준
	유지관리	
<b>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b>		
사업유형	사업명	선정기준
혼합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1 (다문화 이주민+센터) &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2 (집중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지역 특성 반영
		지자체 추진 의지 및 자체 예산 확보
		수요자 의견반영 및 참여도
		사후 관리계획
		창의적인 사업내용
		모범사례로 발전 및 확산 가능성
		다문화 인식 개선 기여도
		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인구감소지역(가점)		
2020 자치단체협업 지원사업	사업의 타당성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 취지 및 내용 이해도 현황·문제점 분석 정확성 및 사업을 통한 해결 가능성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성

계획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독창성		
	조직·인력 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체재원 매칭비율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		
협업의 구체성	홍보 및 사후 관리·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주민(서비스 수요자) 의견반영 노력도		
	적극적 추진 의지(해당 자치단체 역점사업, 기관장의 관심도 등)		
효과성	주관·협조기관의 역할 명확성		
	협조기관의 추진 의지(예산분담, MOU 체결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TF 등 추진체계 구성		
효과성	협업의 난이도(다수 자치단체 기관 참여, 조례 제·개정 필요 등)		
	사업 시행 전·후 주민서비스 개선도(대상 확대, 서비스 질 제고 등)		
	협업을 통한 효과적 자원 활용도 (예산·인력 투입 절약 등)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가능성 등			
<b>10억 원 미만</b>			
사업명	선정기준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 특교세 사업내용	저출산 대응정책	계획의 우수성 지역특성, 지역자원, 공동체연계 등	
		추진의지 인력 및 예산지원, 향후 운영계획 등	
	특교세 사업내용	효용성	기존 인프라 활용여부, 거점 역할 가능성 등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 등
		창의성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확산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주민체감도 수혜자의 만족도 고려 여부	
	가점	민간참여 확대 계획운영방식의 적절성, 구체성, 효과성 등	
	2019년도 ICT-문화융합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사업의 이해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 내용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기획 완성도	목표시장, 이용자, 서비스 등 환경분석 수준
		사업정량/정성목표, 추진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융합 제품 및 서비스 우수성	ICT와 문화분야와의 융합 및 협업수준
		과제의 융합적차 별성 및 독창성 보유
		유사제품·서비스의 대비시장 경쟁력 보유
	사업화 가능성	지재권 등 보유여부, 과제의 확장 등 파급효과
		수요처 및 공급계획의 구체성
		개발완료 후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과제 수행 능력	사업화경험, 제휴 등 파트너 보유 여부
		투입 인력의 규모, 기술수준 등 전문성
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수행경험정도		
일자리 창출	개발계획,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의 타당성	
	신규채용실적 및 추가채용 계획여부	
2021년 지자체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사업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계획여부	
	사업적정성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독창성
	추진체계 적절성	계획수립(주민참여),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방안
	사업효과성	사업의 효과성, 성과관리, 확산가능성
	주체역량	추진의지, 지방비 확보계획
[가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여부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부처별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을 제시한 사업은 30개이며,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순서로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공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하드사업에서만 구체적인 배점기준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소프트사업과 혼합사업에서만 배점기준을 제시하였음
  -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제시한 사업이 30개 사업, 그렇지 않은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31.82%에서 구체적인 배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배점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표 3-15 | 부처별 배점공개 공모사업 수 •

부처명	하드사업	소프트사업	혼합사업	배점공개 사업 수
과학기술통신부	1	2		3
국토교통부	5			5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1			1
산림청		2		2
산업통상자원부	7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1	2
중소벤처기업부		1		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행정안전부		2	5	7
합계	16	8	6	30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공모사업 44개 중 29개 사업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부담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은 19건에 불과하였고, 지방비 부담 비율이 가장 많은 구간은 30% 이상 60% 미만으로 10개였음
  - 구체적인 부담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부담여부 또는 차등부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도 10개로 높은 수준이었음

• 표 3-16 | 지방비 부담 비율 공개 현황 •

구분	없음	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60% 이상~ 100%	기타
하드사업	8	2	9		8
소프트사업	1	1		2	2
혼합사업		4	1		
전체	9	7	10	2	10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구체적으로 사업수행 방식을 제시한 사업을 살펴보면 직접 수행 방식은 8건, 민간 수행 방식 1건, 혼합 27건으로 총 44건 중 36건으로 약 81.82%를 차지하고 있음

• 표 3-17 | 사업수행 방식(직접/위탁 여부) •

구분	직접	민간	혼합
전체	8	1	27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특이사항은 공모사업의 우대 및 감점 현황에 대해서 안내한 내용을 의미한 것으로, 가점 영역에 대한 논의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중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 가점을 부과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주최였음
  - 우대 및 감점은 3점 또는 5점 이내로 부여되는데, 단순히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점수를 기재하고, 어떤 평가 항목인지를 제시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인 것이 특징임

• 표 3-18 | 우대 및 감점 세부 사업별 현황 •

부처	사업명	우대사항	점수	항목
행정안전부	2019년 저출산대응모델육성 공모사업	가점	10	• 계획 및 운영 계획 수립 시 민간참여 확대
	2021년 지자체저출산대응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경진대회	가점	3	• 인구감소지역 여부
	2020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1/2	가점	5	• 인구감소지역 여부
국토교통부	2019~22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공모	가점	20	• 장기미집행 조성 면적 등
	2021년 해외 수소기반대중교통인프라 기술개발사업	우대 및 감점	-	• 평가항목 명시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우대사항	-	•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1년도 시군구 지역연구산업육성(비R&D) 지원	우대(5점) 및 감점	-	• 평가항목 명시 없음

부처	사업명	우대사항	점수	항목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우대사항	-	•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선정	가점	5	•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19년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신규사업	우대 및 감점	3점 이내	•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19년 바이오가스활용 수소융합 충전소사업	우대 및 감점	5점 이내	•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우대 및 감점	3점 이내	•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우대 및 감점	5점 이내	• 평가항목 명시 없음
	2021년도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신규지원	우대 및 감점	5점 이내	• 평가항목 명시 없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8~20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우대(5점) 및 감점	-	• 평가항목 명시 없음

출처 : 공모사업 공고안(44개)을 토대로 재구성

## 실태분석 결과 종합

-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모사업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실증 결과는 찾을 수 없었음
  - 다만, 제주,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전년도 대비 지방비 부담률 증가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음
- 둘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공모사업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률도 약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 지역 인프라와 우수한 재정력으로 인해 공모사업의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비수도권에 경우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이 2019년 기준 44.28% 이나 평균치 보다 높은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 대구, 광주, 대전인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18년 대비 공모사업의 선정 수나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률이 크다는 것이 특징이었음
- 셋째, 유사자치단체 간 비교를 통해 공모사업이 인구와 재정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불균형이 나타남을 확인
  -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나 대전은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광주에 비해 국고 보조사업의 수와 보조사업 금액이 적고, 지방비 부담률은 더 높음

# IV

## 국책 공모사업 합리적 개선방안

- 국책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제도의 개관, 해외사례 검토 및 실태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1. 지방비 부담 완화

- 공모사업 매칭수준에 있어서 일반 국고보조사업보다 지방비 부담이 약 12% 가량 높음 (2019년도 기준)
- 소규모 공모사업도 많기 때문에 전체 공모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약 44%로 나타났으나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훨씬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부처별 전체 지방비 부담률은 약 55%로 2조 3천억 원 규모임
  - 고용노동부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공모사업의 평균 보조율이 70%, 약 390억 원이 소요되었음. 그 다음 환경부의 67%, 약 46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 대규모 국책 공모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이 높다는 주장을 일견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100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서 지방비 매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공모사업 공고 당시 5:5의 매칭비율일지라도 선정을 위해서 더 높게 써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 부담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음

- 대규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합리적 수준의 지방비 부담을 위한 개선이 요구되며, 단순히 지방비를 더 높게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는 등의 재원분담 불균형 행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 지역 균형발전 측면 선정기준 적용

-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지역 균형을 위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서울과 인천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지역 인프라 우수한 재정력을 주요한 선정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에 관한 고려가 부족함
  - 우대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역감소지역을 반영하는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유일하였음
  -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률 자체를 재정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유일함
-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이 지역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3. 선정기준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 선정기준 및 절차를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실태분석 결과, 44개 전체 공모사업 중 배점을 공개하지 않는 공모사업이 14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 9개임
  -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지방비 부담 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이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짐

## 4. 지방자치단체 사전 준비기간 제공

-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지방자치단체 준비기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검토 결과 공모사업 제안서 모집 기간이 사업별로 매우 상이했음
  - 최소 1주일(국민참여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행정안전부)에서 최대 12주(지역에너지 절약사업-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르기까지 공고 기간이 부처별, 사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선정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공모사업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인지 고려해야 함
  - 단순히 1~2주 등 공고기간이 주어졌을 때, 예산부서와의 검토 없이 공모사업이 진행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였음
  - 또한 사전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기존 인프라와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잘 작성할 가능성이 높음
  - 즉,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 정보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문헌

- Asia Development Bank. (2013. 6.). Guidebook: Increasing Climate Change Resilience of Urban Water Infrastructure. ADBI working paper series.
- Ghulam Samad and Qaisar Abbas. (2020. 12.). Infrastructure in Central Asia and Caucasia, ADBI working paper series.
- Reese, S. D., Gandy, O. H. Jr., & Grant, A. E. (Eds.). (2001).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 박병희 외. (2020).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보고서.
- 서현식, 송인국. (2011). 자치행정PR을 위한 자치행정조직의 SNS 활용이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증진과 행정의 관리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정보학회지, 12(5), 137-158.
- 손희준 외. (2015). 지역개발분야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자료.
- 이재원, 박병희, 이종하. (202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6(1), 117-151.
- 이재호. (2004. 12.). 소프트웨어부문 확충을 통한 울산정주성 제고방안. 울산발전연구원.
- 정삼철, 류남훈. (2014). 정부 공모 사업 유치에 위한 대응전략 모색. 충북 FOCUS, (95), 1-27.
- 최병호 외. (201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간 자원분담체계 개선. 한국지방재정학회 보고서.
- 한국재정정보원. (2018).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정책자료.
- 행정안전부. (2019).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 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